

사설

올바른 학제개편을 위해

학제개편위원회의 시안이 모태가 되어 마침내 학교 본부가 마련한 '학부제 발전 및 대학원 중심교육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학내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연구보고서의 마련에 투입된 노력의 양은 물론 기존의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적인 내용으로 인해, 학내 구성원 특히 교수들의 민감한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수평의회는 이미 이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두 차례의 공청회 또한 교수들 간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물론 논쟁의 핵심은 소위 비인기 분야로 분류되는 기초학문의 고사이다. 모집단위에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체능'이라는 세 개의 울타리만 남겨둔 채 학생들에게 전공선택의 문호를 개방하면 인기가 없는 순수학문이 위축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본부의 안 또한 이러한 문제를 예측하고 나름대로의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수들은 이러한 보완책이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본부의 안을 둘러싼 교수들간의 논쟁과 비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데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보다 중요한 기준은 본부의 안이 지향하고 있는 '학생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개혁이 수혜자인 학생들로부터는 어떠한 반응을 얻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쟁점에 관해서 이번 본부의 개혁추진 과정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정작 개혁을 통해 혜택을 제공받을 학생들의 반응을 한번도 체계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두 번에 걸친 공청회에 학생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사실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일부 교수들에게 알려지면서 이미 교수들간에는 상당한 수준의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수혜의 당사자가 되는 학생들에게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 아무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 공청회가 열리는 당일 우리신문에 보도된 기사가 학생들이 학교의 개혁안을 접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였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이다.

학교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부와 대학원의 학생회 또한 이 문제를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넘길 일이 아니다. 비록 개혁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교수들은 물론 학생 그리고 직원 모두 적극적인 의견의 개진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신문사가 이번 주 기획하고 있는 공청회에 총학의 선거후보 진영 모두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청회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이 어느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연세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